前 총무원장 구속 후 법화종 내홍 '몸살'

총무원 · 중앙종회 대립 심화 '악화일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1월 현직 총무원장이 법정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법화종이 이후 사태 수습은 커녕 심각한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무원장 구속으로 궐석이 된 총무원장 서리에 前 감찰부장 진우 스님이 임명됐지만, 최근 법화종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 주지에 폭행 등 전과 의혹이 있는 A스님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종단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서리 불신임을 결의하는 등 사태는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법화종 사태의 발단은 올해 1월 9일, 법화종 총무원장이던 도성 스님이 공찰인 교헌사 주지 임명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법정구속되면서부터다. 당시 도성 스님은 1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즉각 항소했지만 4월 9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법화종은 현직 총무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법화종 종법 제2장 '종무직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무직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으며, 재임 중 이에 해당된 때는 당연 해임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도성 스님의 총무원장 임기는 올 10월까지로, 직무대행 혹은 서리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시급히 총무원장 선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법화종은 도성 스님의 법정구속 이후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종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에 前 감찰부장 진우 스님을 임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진우 스님은 前 총무원장 구속 당시 집행부 임원으로 공찰인 교헌사 주지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수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가, 겸직금지 위반과 학력미달 등 자격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종은 1991년 11월 종헌종법 개정 이후 승려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자 또는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중학교 졸업 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현재 강원교구 종무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법화종 중앙종회, 6월 18일
총무원장 서리 불신임 결의
주지 임명시 배임수재 의혹

종회의원 5명 공권정지 징계
총무원 "종무행정 마비 해종"
"종단 정상화 요원" 우려 확산

진우 스님이 지난 6월 10일 서리 권한으로 안정사 주지를 새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스님은 과거 강간치상과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주지 임명 후 2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6월 16일 교구종무원장회의 중 확인되면서 '배임수재' 의혹이 제기됐다.

여러 의혹에 대해 서리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서리는 종정 스님의 교시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학력 등 자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또 안정사 주지 임명은 집행부 임원회의에서 2억원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성)논란이 있었지만, 변호사 입회 하에 정식절차를 거쳐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억원은 주지 임명 이틀 뒤 통장에 입금됐다고 진우 스님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화종 중앙종회는 6월 18일 제104차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했다. 불심임 사유는 △이력서 허위기재(공문서 위조) △겸직금지 위반(강원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 해산 모의 및 기도 △중앙종회 회의 방해 및 모욕 △중앙종회 종무행정 감사 거부 및 회계감사 지시사항 미이행 △종단 법령집 배부시 종헌종법 위조 △이중승적자 총무원 임원 임명 △종단발전기금 명목으로 총본산 안정사 주지 대가성 임명 △서울 성북구 총무원 청사 매각에 따른 회계보고 거부 등 9개 항목이다.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은 또 불신임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원에 진우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진우 스님을 안정사 주지 임명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 2억원을 비롯, 법화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향후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측도 7월 15일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스님들에 대해 체탈도첩과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내리는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총무원측은 징계사유에 대해 "종단 기강을 무너뜨리고 종무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해종 행위를 했다"고 밝혔지만 징계를 받은 의원 스님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스님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유추할 때,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구속 이후 '비상종단 정상화와 발전 개선방안' 보고서를 종정 스님에게 제출한 것과 종회 회의를 총무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종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종법에 저촉되는 사안도 아니다"며 "중앙종회 보고서는 총무원장 법정 구속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적용되는 종헌종법 규정 및 법률자문과 향후 대책방안으로 구성됐고 종법상 종회 장소도 종회의원 동의로 변경 가능하다. 반드시 총무원 청사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종회의원들이 종단과 총무원을 장악하기 위해 종정을 압박했다"며 "올해 6월 16일 상벌위원회의 1심 징계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서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서리측 집행부와 중앙종회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법화종이 창종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종단인 법화종은 이번 총무원장 구속 사태로 의전순위가 30개 종단 가운데 28위로 밀려나는 등 종단 위상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무엇보다 총무원장 궐석에 따른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시급하지만, 양분된 현 종단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논란 여부를 떠나 총무원 책임자인 총무원장 서리는 중앙종회에 의해 불신임됐고, 종법상 총무원장 선출권한을 가진 중앙종회 의원 9명 가운데 5명이 총무원장 서리에 의해 징계조치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회의장 성운 스님은 "더이상 종단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며 "많은 상처를 입더라도 썩은 부분을 과감히 드러내고 제거해야만 법화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종회 의원들이 제기한 총무원장 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7월 17일 심리 종결됐으며 선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국장 지상 스님과 문화국장 법성 스님이 7월 29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66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성보인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에게 예를 올리고 있다.

美 반출 신흥사 영산회상도 돌아왔다

7월 29일 환지본처… '시왕도'도 함께

한국전쟁 시기 무단반출됐던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66년만에 환지본처됐다.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는 7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조계종과 미국 LA카운티미술관(LACMA)이 지난 6월16일 반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원래 조계종과 신흥사는 미국 현지에서 영산회상도와 시왕도를 이운하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서 성보를 맞이했다.

이날 조계종과 신흥사를 대표해 조계종 총무국장 지상 스님과 문화국장 법성 스님이 성보를 맞았다. 돌아온 불화들은 2년에 걸쳐 박지선 용인대 교수가 복원했으며, 그가 직접 제작한 목함에 담겨 이운됐다.

불화들은 이후 무진동 차량으로 옮겨져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입고됐다. 불화는 8월 말 봉행 예정인 환수 고불식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눔의집 이사 직무정지에 불교계 '공분'

경기도가 나눔의집 이사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우려와 공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묵)는 7월 31일 회원 일동 명의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입장문에서 "민간합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전문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내부 문제 제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조사단'이 아닌 내부 제보자들의 '변호인단'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나눔의집 이사에 대한 집행 정지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결론과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게 아니고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문제 제기 당시부터 나눔의집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제보자에게 법인 운영을 맡기고자 하는 사전포석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7월 29일 대변인 삼혜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나눔의 집' 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즉각 거두어 달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경기도, 이사 직무정지 내려
조계종 · 본사주지 성명 발표
"이재명 지사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조계종은 "객관과 공정은 사라지고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한 조사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며, 나아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종교지도자들도 나눔의집 이사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김희중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은 7월 28일 '나눔의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나눔의집을 오랜 기간 조사를 했음에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더욱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다소 일방적이라는 걱정이 있어 나눔의집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특정한 몇몇 의견에만 주목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깊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 7월 27일 지정 공고
경북 집중된 모전탑 전통 계승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 계열의 전통을 잇는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2호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소재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英陽 縣里 五層模塼石塔)'을 보물 제2069호로 지정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은 경상북도 북쪽 지역인 영양읍 현리의 반변천과 가까운 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옛 사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지 주변에서 출토된 용문(龍紋)의 암막새, 탑의 치석(治) 형태와 문설주의 인동문(忍冬紋, 꽃무늬와 덩굴무늬가 조화를 이룬 무늬),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보고서 등을 통해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로 조성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은 석재를 벽돌(塼)모양으로 다듬어 축조됐고, 크게 기단부 · 탑신부 · 상륜부로 구성됐다. 1층 탑신은 12단으로 축조했고, 남면에 감실(龕室)을 두었다. 감실은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으로 좌우 문설주와 상하에 인방(引枋)을 놓아 문비(門扉)를 설치했다. 벽돌 모양으로 석재를 다듬을 때 모서리돌을 둥글게 처리하여 탑의 조형에 부드러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석탑과 전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 계열의 탑이라는 희소성과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충분히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선 · 직능직 보궐선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이하 중앙선관위)는 7월 27일 회의를 열고 17대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 직능직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직선직 종회의원은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의 후임이며, 직능직 종회의원은 지난 7월 23일 호법부장에 임명된 태원 스님의 후임인 사다.

직선직 선거는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진행되며, 직능직은 9월 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입후보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후보 결격사유가 없는 비구 스님이면 가능하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17일부터 19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강원 지역 '철불' 한 자리에

춘천박물관 2020년 특별전
'불심 깃든 쇳물, 강원 철불'
7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철불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7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0년 특별전 '불심 깃든 쇳물, 강원 철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강원지역에 다수 남아있는 철불만을 주제로 한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불 수 없었던 철불의 내부를 관람객이 직접 볼 수 있다. 무게 250kg내외의 철불 내부는 그 무게로 인해 그동안 공개된 적이 별로 없었다. 아울러 과거 국립박물관에서 수습한 홍천 물걸리사지 출토 철불편의 얼굴 3D 복원 데이터가 최초로 공개된다. 물걸리사지에서 확인된 철불편은 2개체로 추정되며, 국립춘천박물관은 이 중 한 개체의 얼굴을 3D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향후 철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약사불.

국립춘천박물관은 지난 3년간 철불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해왔다. 올해 그 결과물인 '소장품 연구보고서Ⅲ - 강원지역 철불의 과학적 조사 · 분석 보고서Ⅰ' 간행과 더불어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강원 지역 철불의 조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제1부 '여러 재질로 만든 불상들'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불상을 소개한다.

제2부 '시대가 만들어낸 불상들'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서 만들어낸 불상들을 소개한다. 평양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보살상(고구려),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불입상(백제) 등 춘천에서 보기 힘들었던 삼국시대의 불상들이 함께 전시된다.

제3부 '어디서 만들었을까'에서는 철불제작소로 추정되는 동해 지가동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토기편 등 나말여초 시기의 유물들과 불상 주조의 유력한 증거로 추정되는 나발범편 등이 소개된다.

제4부 '어떻게 만들었을까'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철불의 주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5부 '철불 안 들여다보기'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철불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람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관람객은 직접 손전등으로 철불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보존과학의 성과를 보이는 전시인 만큼 철불의 3D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소형 거푸집으로 '나만의 철불 수호신'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당 10명으로 제한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